

의안번호	제 275 호
의결 연월일	2023년 4월 일 (제 408 회)

「정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연월일	2023년 4월 21일

「정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75
----------	-----

제안연월일 : 2023년 4월 21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주문

- 정부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따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실적인 업무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 정부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및 국고지원 확대와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부차원의 인력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제안이유

-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1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며, 1단계 사업으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현실적인 세부추진 계획이나 지침이 부재한 상태이고,

-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소요 예산 확보와 국고지원 없이 소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있는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보육관련 업무 통합에 따른 필요 인력과 조직 구성 등 구체적인 행정적 지원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유보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의 우려가 큼.
- 현재 본격적인 유보통합 시행에 앞서 추진하고자 하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운영하는데 있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업무협력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고, 선도교육청 운영 모형에 따른 정부의 예산 지원책이 부족하여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임.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유보통합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실효성 있는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일원화 관리체계 정비와 유보통합 추진 재원확보와 지원방안 마련 및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에 따른 재정 지원 및 소요인력 추가 정원 배정 등 유보통합 추진 관련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함.

3. 붙임: 건의안

4. 이송처: 대통령, 국회의장(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정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1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과 함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며, 1단계 사업으로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선정·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정부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있는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보육관련 업무 통합에 따른 필요 인력과 조직 구성, 소요예산 등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소요예산 확보와 국고지원도 없이 유보통합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보통합은 막대한 예산이 추가 소요될 수 있는 정책으로 별도의 비용추계 없이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실적에 영향을 받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소요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보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며, 행·재정적 부담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큰 상태입니다.
- 당장, 본격적인 유보통합 시행에 앞서 추진하고자 하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예산은 39억이 전부이고,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추가 인력 지원도 없어 행정적·재정적, 인력 운용 측면에서 많은 혼란과 큰 부담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유아교육·돌봄 격차 완화와 국가 책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성공적 안착을 위해 164만 충청도민과 함께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따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실적인 업무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포함한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요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유보통합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별도 국가 정책 수요 정원으로 추가 배정해야 합니다.

2023. 4.

충 청 북 도 의 회